

군인대출 444억원에 교육 과제 여섯 개가 답이 되는가

금융교육협의회는 교육정책을 의결했고 대부계약의 금리·심사·상환조건은 이번 안건으로 바뀌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회의 결과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31조를 대조해 위험 지표, 교육 의결과 채무구제의 범위를 나눴습니다.

발행	2026.09.01	연번	2026_80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1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444억원을 여섯 과제의 직접 처리대상으로 읽지 않는다. 금융교육협의회는 법이 정한 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이고, 이번 방안은 계약 전후의 판단 역량과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자율·상환일정과 대부업자의 영업행위는 채무조정·감독 규정이라는 별도 경로에서 다뤄야 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2025년 말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대출 잔액은 444억원이었습니다.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는 이를 위험 배경으로 제시하고 여섯 개 교육·상담 과제를 의결했지만 기존 대출계약을 조정하거나 대부업 규칙을 바꾼 결정은 아닙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31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장병 대상 연간 2시간 이상의 기존 교육을 참여·상담·실천 중심으로 바꾸는 여섯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군인대출 잔액	444억원	2025년 말·등록 상위 30개
채무조정 확정	432명	2025년 중 군복무자
지원금액	102억원	채무잔액과 구분
기존 교육	연 2시간 이상	국방부 실시
추진과제	6개	교육·상담·인센티브·전문가·강사망
협의회 규모	25명 이내	법률상 의장 포함

444억원은 대부업권 전체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대출 잔액입니다. 지자체 등록 업자나 미등록 사금융까지 포함한 수치로 확대해 읽으면 안 됩니다.

2025년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확정받은 군복무자는 432명이고 지원금액은 102억원 수준입니다. 발표문은 이를 '지원금액'이라고 했으며 432명의 전체 채무잔액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여섯 과제는 슷폼·예능형 콘텐츠, 1대1 상담, 교육 참여와 건전한 금융생활에 대한 보상, 투자·도박·빚투 예방교육, 금융권 전문가 교육, 강사 역량과 지역 교육망 강화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1조는 금융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둡니다. 협의회의 심의 범위는 금융교육의 종합 추진, 교육 평가·제도개선·부처 협력과 금융역량 강화 안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교육프로그램과 시책을 마련하고 금융역량을 조사하는 근거는 같은 법 제30조입니다. 협의회가 방안을 의결하면 관계기관의 교육 추진 방향은 정해지지만, 협의회 자체가 개별 대출계약을 감면하거나 상환일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출 문제가 교육 의제로 들어온 이유는 군 복무가 정기 급여와 목돈저축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이면서 온라인도박·고위험투자·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예방하는 수단과 이미 생긴 채무를 조정하는 수단은 시간축이 다릅니다.

발표문은 군장병 전용 비대면·대면 재무상담을 두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 실적을 긍정적 신용이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자는 확정 적용이 아니라 관계기관 검토 단계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102억원을 432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361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원금액 기준 평균'일 뿐 개인별 원금·이자·감면액이나 전체 채무잔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계약을 맺은 장병은 교육을 이수해도 이자율과 상환일정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별도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 장병에게는 1대1 상담과 위험교육이 계약 전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교육 이수율보다 고금리 대출 이용, 연체, 도박·빚투 피해와 상담 후 조정 연결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원금액 평균	102억원 ÷ 432명 2,361만원	채무잔액 아님
대출 모집단	상위 30개 등록업자	업권 전체 아님
현재 교육	연 2시간 이상	시간보다 방식 전환
정책 수단	6개 교육·상담 과제	계약조건 변경 없음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집행 일정

여섯 과제의 기관별 시작일, 대상 부대와 연간 인원 목표가 한 표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2 · 성과 지표

교육 뒤 군인대출·연체·채무조정과 도박·빚투 피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03 · 대출 전체상

444억원은 상위 30개 등록업자만의 잔액이라 은행·저축은행·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을 합친 전체 노출은 알 수 없습니다.

04 · 신용평가 연계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 실적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준과 시행일은 검토 단계입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복무 중 대출 상황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신속·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적용 여부를 상담합니다.
- 대부 광고의 일 단위 이자를 연 이자율과 총상환액으로 바꿔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 부대 금융교육과 1대1 상담에서 급여·지출·저축뿐 아니라 보유 대출의 금리·만기·연체 일을 함께 점검합니다.

금융회사

- 군장병 교육·상담을 상품 판매와 분리하고 자사 상품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 상담 뒤 채무조정·서민금융 연결 여부를 익명 통계로 관리해 교육 이수율과 별도로 공개합니다.

당국

- 여섯 과제마다 담당기관, 시작일, 대상 인원과 결과지표를 공개합니다.
- 군인대출 통계를 업권·등록 유형별로 나누고, 교육 성과와 채무조정 성과를 같은 분모로 오해하지 않도록 별도 표로 냅니다.

갈림길**교육 성과가 계약 결과로 측정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여섯 과제의 기관별 목표와 군인대출·연체·채무조정 지표의 연결

A

결과지표를 공개한다

교육 참여가 상담·채무조정과 연체 감소로 이어졌는지 같은 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이수율만 센다

교육을 많이 했다는 사실과 대출 위험이 줄었다는 결과가 분리된 채 남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다음 금융교육협의회 자료에서 기관별 집행 인원과 군인대출·채무조정의 같은 기준 통계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3개의 연결 지식

제도와 규칙 취약계층 금융교육 ↗

제도와 규칙 채무조정 제도 ↗

피해 구제 채무조정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6건

01	1차 ·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가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 금융위원회 회의 보도자료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2	1차 · 상위 30개 등록 금전대부업자의 군인대출 444억원 같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5년 말 기준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3	1차 · 2025년 채무조정 확정 군복무자 432명, 지원금액 102억원 같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4	1차 · 여섯 추진과제, 연 2시간 이상 기존 교육, 상담채널과 신용평가 연계 검토 같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문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5	1차 ·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의장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확인 2026-09-01 · 확인 2026-09-01 원문 열기 ↗
06	파생 · 102억원 ÷ 432명 2,361만원 지원금액 기준 단순 평균. 개인별 채무잔액·감면액 또는 전체 군인대출 평균으로 해석하지 않음 · 확인 2026-09-01

추적 예정	여섯 과제의 기관별 집행실적, 군인대출·연체·채무조정 지표와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용평가 연계 여부가 공개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102억원은 공식 표기의 '지원금액'으로 유지했고 채무잔액이나 감면액으로 바꾸어 쓰지 않았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금융교육 정책과 채무구제 수단의 범위를 구분한 분석입니다. 개별 대출의 이자·상환·채무조정 결과는 계약과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